월/요/광/장

최병진

미디어법 원천무효 투쟁 나서야

지난 22일 재투표, 대리투표 논란 속에 강행처리된 미디어 법의 핵심은 직권상정의 악역을 자임한 김형오 국회의장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밝혔듯이 민생과 직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법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을 방송에 어떻게 참여시키느냐 하는 게 관건이다. 게다가 미디어 법이 갖는 본질적 문제는 여론 다양성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크다는 데 있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언론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여론 다양성 보장을 통한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 유지다.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갖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은 언론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언론이 어느 특정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면 국민들의 의견은 획일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여론 다양성은 민주주의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주요 과제다. 세계적으로 언론 독과점이 심해지면서 여론 다양성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뿐더러 더욱 심하다. 신문시장의 경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개사의 추정발행부수는 649만부로, 종합일간지와 특수지, 지방일간지를 합친 전체 135개 신문사의 총 발행부수 1347만7000부 중 48.3%(조선 17.3%, 중앙 15.5%, 동아 15.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중·동이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에 진출, 아침 신문의 논조를 저녁 9시 조선방송, 중앙방송, 동아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에 똑같이 내보내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론 독과점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미디어 법은 여론의 독과점을 초래하는 언론악법이라 불러 마땅하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 미디어 법의 원천 무효투쟁이다. 특히 방송법의 경우 재석 의원이 부족해 재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투표 과정에서도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되어 원천무효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디어 법은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실시된 미디어 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들에서 미디어 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은 항상 60% 내외를 넘나들었고 찬성이 과반수를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처럼 민심을 외면한 밀어붙이기는 정치적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1996년 12월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은 노동관계법을 날치기 처리했다가 노동계 총파업에 부닥친 끝에, 이듬해 3월 재개정으로 원상 복귀한 전례가 있다. 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였다가 거센 후폭풍에 부닥쳤던 사례로 꼽힌다.

미디어 법의 강행처리로 불이익을 받게 된 지역 언론들도 미디어 법 무효투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개정 신문법의 경우 신문사나 방송사가 다른 일간신문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역시장 확대를 노리는 조·중·동 같은 거대 신문사가 규모가 작은 지역 신문들을 무차별적으로 인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덧붙여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신문고시를 위반하는 신문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신문시장은 무한경품과 무가지 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지역신문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결국 여론의 다양성과 언론의 지역성이 희생될 것이다.

미디어 법 무효투쟁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따라서 미디어 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미디어 법은 민생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미디어 법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날치기 악법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국민 속으로 직접 들어가 알리고 홍보해서 국민들의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언론악법으로는 광무신문지법, 미군정령 88호, 언론기본법 등이 있었다. 이들 악법들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서 신문발행의 허가제 등을 규정한 것으로, 언론계와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철폐투쟁의 결과 정권교체와 더불어 폐기됨으로써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미디어 법은 언론통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당리당략을 위해 자기들을 지지해준 조·중·동 같은 보수 신문에 방송 진입의 길을 터주기 위한 것으로, 법의 성격상 폐기되지는 않더라도 대폭 수정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는 필연이다

호남고속철도가 지난 24일 착공돼 서남권 발전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낳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무안공항 경유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무안공항 경유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또 다른 '지역차별'로 지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호남고속철 1단계 오송~광주 구간은 2014년, 2단계 광주~목포구간은 2017년에 완공된다. 호남고속철은 수도권과 서남권의 활발한 물적·인적교류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이 기대된다.

우리는 호남고속철의 무안국제공항 경유는 필연(必然)이라는 판단이다. 무안공항은 동아시아의 관문이자 서남권의 물류 중심축이다. 서남권의 허브인 셈이다. 따라서 서남권 발전은 무안공항의 활성화 여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공항의 활성화는 연계 교통망에 의해 좌우된다. 국제공항과 고속철도 연계가 세계적인 추세인 것도 이 때문이다. 프랑스 파리의 샤를드골공항과 TGV,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의 ICE, 일본 국제공항과 신간선 고속철도, 중국 상하이 푸동국제공항과 고속자기부상열차와의 연계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는 호남고속철이 무안 국제공항을 경유할 경우 기존 노선보다 17㎞가량 늘어 6천500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며 부정적이다. 하지만, 고속철도는 미래 발전 가능성과 이용 편리성, 공항·산업·관광 인프라 등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최적 노선을 선정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도 무안공항 활성화의 유일한 수단으로 고속철도와의 연계를 꼽고 있다. 따라서 눈 앞의 경제성만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은 극히 근시안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다.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임이 확실해졌다. 정부는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광주·대구 의료협약 체결 동서 상생 계기로

광주시와 대구시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마주 잡는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김범일 대구시장은 오는 2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양 지역의 의료산업 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두 도시는 협약체결에 따라 의료연구개발 기관 간 교류 협력과 지역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또 두 도시 가운데 한 곳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지역으로 선정되면 의료 연구개발 공동 추진, 연구 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와 대구시는 협력할 분야가 많다. 광주는 최근 광산업, 디지털 가전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대구·경북은 IT, 신소재 산업에서 강점이 있다. 두 지역이 의료산업을 중심으로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두 도시간 협력이 확산될 경우 양 지역 주력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특히 이번 의료협약 체결을 해묵은 영호남 지역감정을 허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와 대구지역간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 1984년 개통된 88고속도로는 2차선에다 급커브 구간이 많아 '죽음의 고속도로'로 불릴 정도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 현재 도로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나 제 기능을 다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동서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새로운 교통망 건설이 요구되고 있다. 고속철도와 연계해 고속화된 간선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광주~남원~대구 등 영호남 지역을 직선거리로 잇는 철도건설이 시급하다.

지역갈등을 허물기 위해서는 경제 협력과 인적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광주시와 대구시의 의료협약 체결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법조 칼럼

노진영

쌍둥이 아빠의 제대를 보면서

지난 2007년 7월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는 병역특례비리수사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및 발표가 있었다.

서울동부지검에서는 2007년 4월 25일부터 2007년 7월 26일까지 103명의 병역특례자들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취소 등을 통보하여 군입대를 하게 하고, 30여 개 병역특례업체의 운영자를 형사처벌하였다. 또 병역법 개정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두어 병역 비리수사가 '2007년 최우수 특수수사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위 병역 비리수사의 특징 중의 하나는 병역특례업체들이 대부분 정보처리업체, 연구소 등인 관계로 피내사자인 업주들이나 참고인인 병역특례요원들의 학력이 기본적으로 대졸, 나아가 유학파, 석·박사 출신들로서 단일사건으로는 그 어떤 사건보다 피내사자 및 참고인들의 학력이 높고, 나이도 어린 편이었다는 점이다.

이들의 고학력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보처리업계를 이끌어나가고, 석학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주어야 할 인물들이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 탈법적으로 병역의무를 면탈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필자는 연예인 전담(?) 검사로서 아이돌 그룹 멤버 출신들의 부실복무 혐의를 수사한 바 있는데,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온 이 친구들 때문에 밤늦게까지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어 사고의 우려가 있었으나 스스로 무사히 탈출(?)하여 다년간의 연예계 생활로 인한 노하우를 보여주는 듯한 해프닝도 있었다.

당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음악인 P군의 부실복무 사건은 필자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될 것 같은데, 2주 동안 몇 군데의 압수·수색과 관련자 10여 명의 수사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도 하였거니와 직접 조사했던 위 P군이 예의바르고 건전한 의식을 가진 청년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사실 "쌍둥이의 아빠인 P군이 설마 현역이야 가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실은 냉정하여 2007년 12월께 그는 현역으로 입대를 하고 말았다. 법질서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마땅할 것이나, 이 사태를 바라보는 필자의 마음은 내심 무척이나 안쓰러웠다.

그랬는데, 최근 그가 돌아왔다.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조용히 제대하여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단다.

그에 대한 기사를 읽으며 필자는 온 마음으로 그의 복귀를 축복하였다. 20개월의 시간 동안 그가 더 단단해지고, 그의 눈이 더 깊어졌기를…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훌륭한 음악을 발표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병역비리 수사가 한참일 당시 어느 청년이 병역비리에 대해서 하였던 TV 인터뷰 내용이 아직도 가슴을 울린다. "병역비리요? 돈 없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 지켜주는 거죠"

P군의 사례가 밑거름이 되어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더욱 뿌리 깊어지고 차후로는 병역비리수사 자체가 필요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바람이다. 〈광주지검 형사2부 검사〉

기고

강현정

한식 세계화의 꿈을 향하여

광주시에 국산김치를 세계음식으로 우뚝 서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세계김치연구소'가 들어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김치 종주국의 위상 회복과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국책연구소로 설립되는 세계김치연구소의 입지 장소로 광주시를 선정했다. 이에 광주시는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 '김치클러스터' 조성에 나서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 시장 공략에 적극적인 일본의 '기무치'를 제치고 세계 대표적 '웰빙 식품'으로 만든다는 전략이다.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세계는 '대장금'이나 '식객' 등 한류 열풍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가치를 조금씩 인정하고 있다. 몇 해 전 미국 월간지 'Health'는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김치를 선정했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지'도 한식을 적절한 균형을 갖춘 모범적인 식단으로 소개한 적 있다. 그러나 이미 '글로벌 푸드'로 인정받고 있는 이탈리아의 피자와 스파게티를 비롯해 일본의 스시, 다양하고 화려한 중국요리 등에 비하면 한식의 세계화 수준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독창성이나 건강 친화성 등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식이 아직 '글로벌 푸드'에 못 미치는 이유는 뭘까? 얼마 전 해외여행을 할 때 찾았던 한식당에서의 경험이 해답이 될 듯하다. 고된 일정과 낯선 음식에 지쳐있던 우리 일행은 큰 기대를 품고 한식당으로 향했다. 이국에서 먹어보는 한식이라니… 그러나 단 몇 숟가락 만에 우리의 기대는 무너졌고 그나마 있던 식욕마저 잃어버렸다.

배추 대신 양배추로 담근 김치와 감칠맛 없이 그저 맵기만 한 동남아산 고춧가루, 불면 날아갈세라 찰기도 없이 푸석푸석한 쌀밥 등… 모두 한식을 흉내 낸 국적불명의 음식이었다. 주인은 신선한 한국산 식재료를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실제로 쌀을 비롯해 각종 채소, 육류 등 국내산 식재료의 해외수출은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이니 그럴 만도 하겠다 싶었다.

음식 맛은 식재료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신선한 국내산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 없이는 한식의 세계화도 요원하다. 이미 식재료 시장의 선점을 통해 세계의 음식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때마침 농림수산식품부가 2012년까지 농식품 100억 달러 수출목표를 세우고 식재료를 향후 농식품 수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말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

최근 한식 세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지중해의 건강 장수식을 능가하는 한식이 전 세계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 그리고 수출업계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식 세계화는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농산물 수출 증대를 통해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농협교육원 교수〉

無等鼓

수사십결(搜查十訣)

'거악(巨惡)이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하라' 리쿠르트 스캔들과 록히드 사건을 파헤친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의 모토다. 우리나라 검찰도 거악 척결을 사명으로 삼는다. 사회악과 싸워 법의 엄정함을 일깨워야 하는 검사는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다.

'특별수사통'으로 이름을 날렸던 심재륜 전 고검장(65)이 '수사 십계명'을 제시해 화제다. 최근 검찰동우회 소식지에 기고한 '수사십결(搜查十訣)'이 그것이다.

첫째는 '칼은, 찌르되 비틀지는 마라'다. 수사 대상자는 자유와 재산, 명예 등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잃게 되므로 그 고통을 헤아리라는 훈계다. 불필요한 반복 소환과 가혹행위, 인격모독, 압박용 계좌추적 등을 '칼을 비트는' 사례로 거론했다.

'수사하다 곁가지를 치지 마라'라는 주문도 눈에 띈다. 비슷한 사건에 손을 대 수사가 장기화되면 본질이 변하게 되니 적당한 시기에 마무리 지으라는 조언이다.

이와 함께 '끈질긴 수사도 좋지만 외통수는 금물이다' '독이 든 범죄정보는 피하라' '수사는 종합예술이다. 절차탁마하라'는 계명을 통해 특수수사의 맥을 짚었다. 언론과 관계에 대해선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 원칙을 제시했다. 언론을 이용하려 하거나, 적으로 돌리는 검사를 동시에 경계하며 "성공하는 수사는 신뢰받는 언론관계에 있음을 명심하라"고 훈수했다. '칼에는 눈이 없다. 잘못 쓰면 자신도 다친다'며 철저한 자기관리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실패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낙마로 지휘부 공백 사태를 맞은 검찰이 '민생 챙기기'에 적극 나섰다. 굵직한 특수수사보다는 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근절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심 전 고검장의 고언이 신뢰의 위기에 처한 검찰에 약으로 쓰이기를 바란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양주가 대세인 술 시장…전통주도 관심 가졌으면

술 마시는 양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단연 톱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외국산 술을 마신다. 한국의 한해 술시장은 1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인데 그중 우리나라 전통주의 점유율은 0.3%에도 미치지 못하며 위스키와 와인에 잠식당해 있다.

우리나라 전통주라 하면 동동주와 막걸리가 있다. 막걸리는 미생물에 의해 발효시킨 자연식품으로, 술이면서도 건강식품이다. 알코올 도수가 낮아 부담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이 10여 종 함유된 식품이다. 다른 술과 달리 막걸리엔 1.9%의 단백질이 들어 있다. 우유의 단백질이 3%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다.

이제 우리 술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접대할 때 위스키나 양주만 찾을 게 아니라 우리 전통주를 찾는 풍토, 그리고 유흥업소나 룸살롱 같은 데서도 왜 양주만이 대세인지 다함께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김윤남·광주시 남구 방림동

美 비자면제 이용한 '원정출산' 부끄러운줄 알아야

요즘 모 드라마 여주인공이 미국에서 원정출산한 장본인이라 해서 인터넷에 말이 많다. 장차 노인세대를 부양할 출산인구가 부족하고 국방인력조차 부족해 동원예비군 훈련도 2박3일에서 4박5일로 늘릴거라는 정부 발표도 있었다. 그런데 미국까지 가서 애를 낳고 돌아와 TV에 주인공이라며 드라마를 찍고 있으니 대한국민 시청자라면 불쾌하고 짜증이 나는 게 당연하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대상국에 가입돼 단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원정출산이 늘고 있다고 한다.

사실 무비자 입국 이전에는 임산부들이 관광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정출산 의심 때문에 체류기간이 30일로 제한됐었다. 그런데 미국과 비자 면제프로그램이 시행돼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보장되니 2~3개월이면 되는 원정출산에 안성맞춤이 된 것이다.

원래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이 이처럼 일부 부유층과 야비한 이중인격자들이 원정출산의 편법으로 활용하니 미국 내에서 한국인의 이미지 실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

▲노은영·목포시 석현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